

요약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전략은 핀테크 도시화, 테스트 베드 설치, 집적지 조성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대중화로 금융-기술 결합한 '핀테크' 등장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가 등장했고 금융거래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거래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बैं킹과 전자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일부 국내업체들은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2002년 국내 업체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시도하였고, 2005년에는 웹표준 기반 결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해외보다 늦어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규제 완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14년 7월 온라인·모바일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고, 2015년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 후 P2P대출을 허가하였고,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크라우드펀딩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국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플랫폼, 보안인증 등의 기술 핀테크 분야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핀테크 생태계 조성 노력... 은행들도 Lab 설립해 관련기업 지원

금융위원회는 2015년 핀테크 산업을 위해 4단계의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1단계는 '진입장벽 완화' 단계로 보안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시장진입 장애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2단계는 '생태계 조성' 단계로 핀테크지원센터 및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3단계는 '규제패러다임 전환' 단계로 간편 금융거래(모바일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를 허용하는 것이다. 4단계는 '새로운 핀테크 활성화' 단계로서 신생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추진전략은 상당부분 시행이 완료된 상태이다.

정부도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은행사, 카드사들이 협력하여 2015년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상주하여 상담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자금조달이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망기업들의 진출을 돕고자 주기적으로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식출범하여 핀테크업체와 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픈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입법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는 약 110개사로 핀테크, 금융, IT 등 다양한 업종이며, 지급·결제 분야의 회원사가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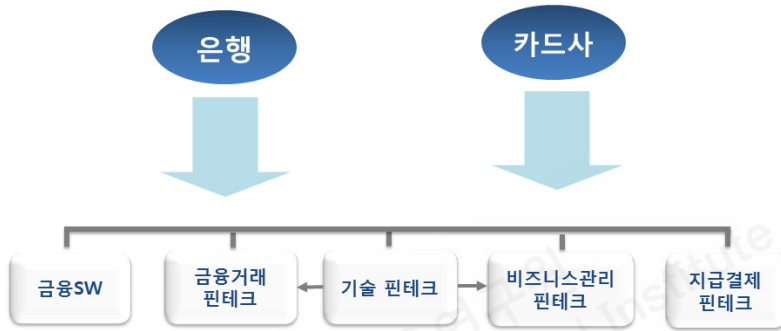
은행들도 핀테크 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담조직을 만들어 핀테크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을 비롯해 간편결제, 송금, 대출, 보안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금 업체인 비비리퍼블리카와 협력하여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안인증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체인식, 수기사인 등의 비대면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별도의 핀테크 Lab을 설립하여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금융거래 집중.. 핀테크 산업, 전후방 협력관계 구축 필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핀테크 산업은 전후방 협력관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했더라도 전방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후방에서는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와 기술 핀테크 회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 특징은 국내 핀테크 시장은 금융거래(B2C) 핀테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지급결제,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송금분야의 핀테크 기업들이 많고 은행, 증권사, 대형 포털사들도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거래(B2C)시장의 집중화 현상은 소매금융 위주로 형성된 해외 핀테크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업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창업자금 조달이 수월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전통적 금융기관들이다. 은행은 모바일뱅크로 소액대출 시장에 진출하였고, 증권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나서고 있다. 그다음 계층에는 5가지로 분류되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다. 먼저 PG 등 지급결제 기업과 금융 IT 기술을 축적해온 금융SW 기업이 있다. 또한 P2P대출이나 송금 등의 금융거래(B2B) 핀테크 기업과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의 기술을 개발해온 기술 핀테크 기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관리 및 마케팅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기업들이 있다.



[그림 1] 핀테크 기업의 다층적 구조

서울시, 핀테크 집적지 조성해 기존업체·스타트업 육성 바람직

서울시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서울을 ‘핀테크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우수한 IT 인프라, 핀테크 기반기술을 보유한 업체, 상거래 활성화 등에서 서울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를 시정에 도입할 수 있다. 교통, 복지, 서민금융, 전통시장 지원 등의 시정에 핀테크를 도입하여 공공 핀테크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가 핀테크 테스트 베드(Test-bed)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사용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핀테크업체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핀테크 기술을 개발과 사업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핀테크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핀테크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서울시가 핀테크업체에 복지서비스 관련정보를 제공하면, 핀테크업체들은 복지급

여 송금, 급여사용 분석 등과 관련된 복지운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사업모델도 파생될 수 있다.

다른 적용방안은 ‘서울시 가계부’ 사업이다. 핀테크업체는 신용도 조사를 위해 금융잔고, 대출 금액, 카드사용 등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가 지급해야 하는 세금, 공과금에 관한 공공정보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협력 아래 핀테크 기업은 세금, 공과금 등 공공납부금 자료를 확보한 후 가계부 앱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금융거래 정보와 세금, 공과금 등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가계부 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핀테크 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서울소재 핀테크 기업은 112개였으며 주로 강남, 영등포, 구로에 밀집되어 있었다. 특히, 핀테크 기반기술 및 금융 SW와 관련된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기업들은 여의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구로디지털밸리의 IT인력 활용을 위해 영등포 및 구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영등포구에 핀테크 집적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집적지에 핀테크 중견업체와 신생업체들을 유치하여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